

우원식, 예산안 본회의 상정 보류... “여야 합의를”

국회의장

10일까지 요청... 민주, 유감 표명 국힘 “일방 처리, 사과·철회 먼저” 야,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안 보고 여 “정부 무력화 정치테러”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2일)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약자, 취약계



與, 민주당 규탄대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예산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자,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했다”며 “이러니 최고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

방 처리한 데 대해, 사과·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의 직전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



野,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상윤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의외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

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4건의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하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주철현 발의, ‘경로당 부식 지원 노인복지법’ 본회의 통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사진)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더해 찬탄 등 부



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유족 범위 확대 ‘여순법’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을·사진)은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또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돼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



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신설됐다.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김건희 특검 서명운동 참여 260만명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추진 중인 서명운동 참여자가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성희 대변인은 이날 대구 중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총 261만2352만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수치로, 주말 새 참여한 인원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전체 서명 인원이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볼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더 폭발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지역위원 출·퇴근 피케팅을 하고, 앞으로는 온라인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김건희 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영세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경감”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주제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정부 임기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후반기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세운 뒤 이뤄진 첫 민생 행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

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악성리뷰·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계재된 악성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 변심으로 인한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면제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문제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불법 여론조사 의혹’尹 부부 검찰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더불어민주당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민주당은 명태군 씨가 대선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군 씨의 의혹이 파도파도 끝이 없고 점입가경이다. 녹취록과 각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김영선 전 의원과 조은

희 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관련 어마어마한 공천 당무개입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과 무상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제공한 뇌물죄,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국가 기밀 누설 등 법률 위반이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불법 여론조사의 정황으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

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이행각서를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 각서가 지난 2022년 7월 31일 PNR의 요구로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해당 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게 있으며, 대선 중 이어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한다”며 “해당 금액 6215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고 적혀있다.

진상조사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국정농단과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우선 윤 대통령 부부의 교체한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 증거 보전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